

남북, '금강산 피살사건' 긴장 고조

# 北 “南이 사과” 적반하장 ... 경색 불가피

정부, 의혹 제기... 강경 대응 기조

장기화 땀 개성관광 등 중단될 수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태 이후 남북이 책임소재와 남측 당국자의 현장 조사 허용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13일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을 본격 제기하며 북의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하고 나서 사후 수습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책임 공방 및 현지 조사 일축**=정부는 12일 북한이 우리 입장을 담은 전문문 수신을 거부하자 전문문 전문을 공개, 사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현지조사에 대한 북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북한은 사건 발생 38시간 만인 12일 오후 7시 금강산사업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책임 소재와 관련, 북측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통제구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사격이 불가피했다면서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한 뒤 사

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민간인 관광객 사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북측이 제지 및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사살한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남측은 나아가 정부 당국자가 포함된 조사단을 현지로 급파하겠다고 북측의 협조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사고 경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이미 사고 발생시 현대 측 인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했다”면서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부 의혹 제기**=정부는 13일 사건 목격자의 진술 중 총격 횟수 등이 북측 설명과 어긋나자 통일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비치호텔 CCTV에 찍힌 박씨와 그의 호텔 출발 시각(11일 오전 4시30분)과 북측이 밝힌 박씨의 사망시각(11일 오전 4시 50분), 북측이 현대아산 측에 설명한 군사통제구역 내 박씨 동선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 북측의 설명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이 13일 오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로 하면 박씨는 적어도 3천m를 20분에 주파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백사장에서 치마를 입은 50대 여성이 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장**=우리 정부는 진상규명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게 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에 대한 짐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처럼 북한이 초기에 강경 대응기조를 밝힌 상황인데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는 물론 개성관광의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민간 교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행보도 관망세로 돌아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안인 대북 지원,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3통 등의 해결 모색도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격자 “2발 총성 동시에 비명” 증언

북 “경고 사격후 발포” 설명과 달라

## ■ 관광객 피살 의문 투성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이 밝힌 사고경위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남측 관광객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북측이 현대아산 측에 설명한 부분 외에는 이 사건을 파악할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어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특히 이 목격자의 증언은 지금까지 북측이 밝힌 사고경위와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진상을 규명하는 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학생 이인복(23·경북대 사학과 2)씨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11일 오전 4시50분께 검은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북측으로 걸어올라갔고, 5~10분쯤 뒤에 10초 정도의 간격으로 두 발의 총소리와 비명이 거의 동시에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성이 난 방향을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내가 있던 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숲속에서 군인 3명 가량이 뛰어어나 쓰러진 사람이 살았는지를 확인하려는 듯 발로 건드리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이같은 증언은 (숨진) 박

자(53·여)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경계지역에 진입했고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 경고사격을 한 뒤 총격을 가했다는 북측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숨진 박씨의 시신에서는 등과 엉덩이 2곳에서 총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북측에서 경고 사격을 했다면 최소 3번의 총성이 울렸어야 한다.

“경고 사격”을 했다는 것은 초병이 근무수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얘기인데, 만약 이씨의 증언대로라면 북측은 경고사격 없이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또 이씨가 증언 여성이 북측으로 ‘걸어’ 올라간 것을 본 뒤 총성을 들을 때까지 시간 간격은 불과 5~10분 정도에 불과해 이 사이 박씨가 관광통제선 울타리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북측 초소까지 걸어갔다 다시 1km를 뛰어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목격자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되는 내용 등을 종합해 전체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아산이 13일 오전 촬영해 공개한 금강산 관광객 박씨 사망지 피살사건 현장 인근의 관광통제 펜스. ‘진입할 수 없습니다’ 문구가 적혀있는 출입제한 뜻말이 서있고 펜스와 바닷가 사이에는 모래언덕이 이어져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남북 합의 위반 제기

‘남측 인원 신체·주거·개인재산 불가침 보장’ 어겨

정부가 13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씨 사망 사건과 관련, 북측 합의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해당 지구에서의 법질서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조사를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남측에 추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총격과 같은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이하 합의서)’에 의하면 우리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

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명에서 북한이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합의서 내용은 제10조의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대목이다.

또 조사절차 없이 박씨를 사살한 행위는 역시 같은 10조의 ‘(남측)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측은 이를 중지

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는 조문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같은 10조의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문에 비춰봐도 북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북측 군사통제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남북간에 논쟁이 벌어질 경우 합의서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짙어진다.

북측은 전남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박씨를 사살한데 대해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 측 군사통제구역 안까지 들어온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박씨가 초병의 정지 요구와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격했다며 책임소재를 남측에 전가했다.

/연합뉴스

우리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수원